

복지국가의 빈곤 추세와 변화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김 환 준

(경북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의 가구소득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 이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실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빈곤의 변화추세를 인구집단별 및 소득원별로 분해함으로써 경제사회구조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변화가 빈곤의 추세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노령층이나 편부모가구 등 전통적으로 빈곤의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때문만은 아니다. 노령층의 경우 연금제도 등 공적소득이전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연령층에 비해 빈곤상태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소득의 빈곤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편부모가구는 전반적으로 생산연령층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심한 편이나 빈곤의 변화추세는 노동시장정책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 특히 시장소득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가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이 계층에 대한 빈곤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빈곤, 복지국가, 공적소득이전, 세계화, 노동시장, 시장소득, 빈곤완화효과

1. 서 론

2차 대전 이후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인 확충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및 조세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려는 복지국가의 시도는 197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사회, 경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3년 신진교수연구과제(KRF-2003-003-B00161)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제적 환경은 복지국가의 팽창기 때와는 크게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복지국가의 변화와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증과 생산연령인구의 정체 내지 감소, 편부모 가구 등 상대적으로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를 통해 사회복지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한편, 사회복지의 공급측면에서는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도 제조업의 퇴조와 함께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우위의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구경제화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강조되면서 시간제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유연성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구경제화에 따른 국민국가의 쇠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에 개입하고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Esping-Andersen, 1996; Kuhnle, 2000; Mahler, 2001; Smeeding, 2002).

복지국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빈곤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사회, 경제적 조건들은 대부분 (비록 불가피할지는 모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인가? 자료의 제약이라는 결정적인 한계로 인해 빈곤의 실태를 국가간에 비교하는 실증연구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도 초기에는 주로 한 시점에서의 횡단적인 비교연구에 머물러 있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빈곤의 추세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몇몇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볼 때 서구 복지국가에서 1980년대 이후 빈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Atkinson, 1998; Burniaux, 1998; Förster, 2000; Ritakallio, 2001; Smeeding, 2002). 그러나 빈곤의 정도와 변화 추세는 국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예컨대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는 1980~90년대에 걸쳐 빈곤이 크게 심화된데 비해 룩셈부르크와 핀란드에서는 같은 기간 중 빈곤이 다소나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빈곤의 정도와 변화추세에 있어서 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답은 이른바 “사회복지결정논리”, 즉 국가간에 서로 다른 사회복지(특히 소득보장) 정책 내지 재분배정책의 차이가 불평등 및 빈곤의 국가간 편차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¹⁾(Förster, 2000; Gustafsson and Johansson, 1997; Kangas and Palme, 1998; Korpi and Palme, 1998; Kim, 2000; Mitchell, 1991). 하지만 이것은 정태적인 한 시점의 횡단연구에서 빈곤의 국가간 편차를 설명하는 논리로 주로 사용되는 반면, 동태적인 추세를 설명하는 데는 다소간의 제약을 가진다. 그 이유는 소득보장 및 재분배정책이 비록 국가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지만 한 나라에서는 시계열적으로 그다지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논리는 사회복지정책의 차이라는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일부는 서구 복지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또 다른 요인들은 나라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 하에서

1) 물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따진다면 국가간에 상이한 정치, 사회, 가치 및 이념적 요인들이 소득보장 및 재분배정책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불평등과 빈곤의 차이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다.

1980년대 이후 2000년까지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변화추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2.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변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크게 본다면 구조적 변화와 제도적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Cohen, Piketty, and Saint-Paul, 2002). 구조적 변화라고 함은 인구구성, 산업 및 노동시장구조 등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구 복지국가들이 비교적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조세, 최저임금제 등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제도의 변화는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경험하는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제도적 변화의 차이로 말미암아 빈곤의 변화추세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본 절에서는 서구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와 그것이 빈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빈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회구조의 변화로서 인구의 노령화를 들 수 있다. 의학기술의 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노인들의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출산율은 감소함으로써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층(15-64세)의 인구 한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 즉 노인부양비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OECD 27개국 평균 20.6%에 이르고 있으며, 2050년에는 거의 5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United Nations, 2001).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만한 특징으로는 한부모가족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제외한 서유럽국가들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는 이혼율(연간이혼건수/연간결혼건수)이 20~30% 대에 머물고 있었으나 2000년을 전후해서는 50%를 넘어서거나 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OECD, 2002a).²⁾ 또한 미혼여성의 출산도 1960년대 이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ILO, 2000), 모자가정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핵가족화, 이혼 및 혼외출산의 증가로 인해 서구국가에서는 전체가구 가운데 한부모가구(특히 편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³⁾

모자가구의 여성세대주는 소득활동과 자녀양육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부담

2) 미국과 덴마크는 이와 다소 다른 추세를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 1980년에 이미 49.8%라는 높은 수준의 이혼율을 기록하여 이후에는 이혼율의 증가가 정체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덴마크 역시 1980년에 50%가 넘는 이혼율을 기록하였으나 이후에는 감소추세를 보여 2000년에는 37.5%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3)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80년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10.0%가 편모가구였으나 2000년에는 16.3%로 증가하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는 1980년 12.6%에서 2000년에는 21.4%로 급증하였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0).

을 안게 된다. 더욱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라는 문제를 고려한다면 여성세대주거구는 빈곤의 위험에 훨씬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다. 사회복지급여를 합한다 하더라도 여성세대주거구의 가처분 소득은 양부모가구 평균가처분소득의 50~70% 수준에 불과하며(Förster and Pearson, 2002), 빈곤할 가능성 또한 일반가구에 비해 3배 이상 높다(ILO, 2000). 뿐만 아니라 여성세대주거구는 일단 빈곤에 빠지면 빈곤이 지속되는 기간 또한 훨씬 길게 나타난다(Oxley, Dang, and Antolin, 2000).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즉 노인인구 및 모자가구의 증가는 빈곤의 변화추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이들 집단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는 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빈곤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점이다. 이미 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한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연금 급여의 축소와 같은 특별한 정책변화가 없는 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연금급여총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연금급여총액'이라는 다른 조건이 변화한다면 노인인구의 증가가 반드시 빈곤의 증가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⁴⁾ 마찬가지로, 모자가구의 증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에도 소득보장제도라는 매개변수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자가구의 빈곤추세에 대해서는 소득보장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구조적, 제도적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경제구조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육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진 어머니들 역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2000년 현재 영국, 미국과 독일의 경우 50~55% 정도,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2/3, 그리고 스웨덴과 덴마크는 3/4 가량의 어머니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다(OECD, 2002b). 이처럼 여성노동시장참가가 증가하면서 탁아(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위한 공공탁아서비스는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1990년대 중반경의 자료에 의하면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의 14%(미국)~99%(프랑스)가 공공탁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공공탁아서비스는 아직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미국(1%)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나라에서 10% 미만의 영아들만이 공공탁아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48%), 스웨덴(33%), 노르웨이(31%) 등 북유럽 국가들의 영아에 대한 공공탁아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유급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허용기간 등에 있어서도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대륙국가나 영어권 국가들에 비해 여성들이 훨씬 노동시장에 참여하기에 용이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Daly, 2000). 이와 같은 구조적, 제도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편모가구의 증가가 반드시 빈곤의 증가를 야기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나라마다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조변화는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그리고 구조적인 경기침체 및 실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세계화(globalization)'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생산물과 생산요소, 기술 및

4) 노인인구가 생산연령인구보다 소득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연령집단별로 빈곤의 규모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노령층은 생산연령인구, 그 가운데서도 특히 18-30세의 청년층보다 결코 가난하지 않으며 시계열적으로도 노령층의 빈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Ritakallio, 2001).

정보의 교류가 국경을 넘어 지구전체적으로 확산되는 현상, 즉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Rodrik, 2000; 김관호, 2003).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경제의 세계화는 정보, 통신, 교통, 운송기술의 발전과 각국의 무역장벽 완화를 바탕으로 국제무역의 자유화, 해외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확대, 국가 간 금융자본 및 노동력 이동의 확대, 다국적 기업의 증가(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등의 경제적 변화가 확산되며, 이 결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World Bank, 2002; ILO, 2004).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양차대전 등 이례적인 기간을 제외하고) 자본주의경제의 발전과 함께 세계화는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말의 세계화 현상은 그 범위와 속도의 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무역장벽이 축소되었으며 국가간의 교역량도 1970년대에는 GDP의 30%에 못 미쳤으나 1990년대 말에는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해외직접투자(FDI)는 1980년대 초~1990년대 말 사이에 40배 이상 증가하였다(World Bank, 2003).

이와 같은 경제 세계화의 조류가 개별국가의 빈곤실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세계화라는 한 국가의 경제와 산업구조는 물론, 시장가격, 소비유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생산과 고용, 임금 및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과 가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세계화라는 거시적인 경제 변화가 개인과 가구의 빈곤이라는 미시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명료하게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헉서-오린 명제(Heckscher-Ohlin Theorem) 및 스톨퍼-새뮤얼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를 간단히 응용하여 개략적으로 유추해 보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⁵⁾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노동에 비해 자본에, 그리고 비숙련노동력에 비해 고숙련노동력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자본의 가격과 고숙련노동력의 가격(임금)이 상승하는 반면 노동의 가격과 비숙련노동자의 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경제, 사회적 조건이나 재분배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서구국가에서는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임금 및 소득불평등과 빈곤(특히 상대적 개념의 빈곤)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서구국가들의 미시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이래 서구국가, 특히 영국과 미국의 임금불평등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Acemoglu, 2002; Gottschalk and Smeeding, 1997; Gottschalk and Mary, 1998; Katz and Autor, 2000). 유럽국가의 임금불평등은 영미에 비해서 매우 완만한 증가 내지 정체를 보이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강력한 노동조합과 단체 임금협상, 최저임금제 등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임금불평등의 증가가 억제되기 때문이다.⁶⁾ 그러나 고기술(또는 교육)에 대한 수요요인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임금격차의 증가

5) 노동(또는 자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풍부한 나라는 국제교역에서 노동(자본)집약적 상품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점을 헉서-오린 명제라 하고, 스톨퍼-새뮤얼슨 정리는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과 그 생산요소의 국내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김관호, 2003).

6) 유럽국가의 임금불평등 증가가 완만한 또 다른 이유로서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기술편향성(skill-biased)이 덜하다는 점, 공급측면에서 고숙련노동자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Acemoglu, 2002).

가 억제된다면 실업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럽국가의 경우에도 비록 임금불평등은 크게 증가하지 않으나,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전체인구의 소득불평등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인다.⁷⁾

물론 이러한 불평등증가추세가 전적으로 세계화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세계화를 옹호하는 측의 주장처럼 개별국가의 소득분배는 세계화와는 무관하게 해당국가의 경제, 사회정책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World Bank, 2002).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이 한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시장개방과 경쟁의 강화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노동부문, 특히 저학력/비숙련 노동력이 세계화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시대에 요구되는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을 위한 국민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재정적 능력이 약화되지 않을 수 없다(Mishra, 1999). 결국 Rodrik(1997)이 지적한 것처럼 세계화는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집단에 대한 “사회보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데 비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능력은 오히려 약화시킴으로써”(p. 53) 결과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화와 함께 주목할만한 경제적 변화는 노동시장구조에서 나타난다. 1970년대 이래 서구 자본주의 경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의 중심이 이동하는 이른바 탈산업화 내지 후기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를 맞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산업별 고용인구가 1980년에 1차 산업 12%, 2차 산업 36%, 3차 산업 52%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7년에는 1차 산업이 8%, 2차 산업이 28%로 각각 줄어든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64%로 증가하였다. 미국은 탈산업화의 추세가 더욱 심해서 1980년에 제조업이 31%, 서비스업이 65%를 차지하다가 1997년에는 제조업이 24%, 서비스업은 73%에 이르게 되었다(ILO, 1999).

제조업부문은 비교적 동질적인 노동과 보상을 특징으로 하는데 반해 서비스업은 노동의 종류와 질, 강도, 생산성 등에 있어서 매우 상이한 직종들을 포괄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크게 고숙련 비육체노동을 수행하는 전문직종과 저숙련 노동자들이 중심을 이루는 단순서비스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서비스업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이 퇴조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임금 및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경제의 세계화 및 이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성의 강조 등의 요인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노동시장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서 주목할만한 특징으로 먼저 고용형태의 다변화를 들 수 있다. 유럽국가의 경우 비록 아직까지는 표준적인 전일제정규고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시간제와 임시직 고용형태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8년에 유럽연합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7.4%를 점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등 몇몇 국가에서는 40%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7) 룩셈부르크소득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0~90년대에 걸쳐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소득불평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meeding, 2002; Forster, 2000)

1994년 이후 유럽연합에서 새로 창출된 430만 개의 일자리 가운데 80% 가량은 시간제 일자리인데, 이 일자리의 2/3 정도는 여성들로 채워졌다(European Commission, 2000; Sarfati, 2002). 한편, 제한된 기간동안을 명시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임시직 고용형태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1985년 전체 고용의 8% 정도에 머물던 데서 1998년에는 14%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시간제 고용이 주로 여성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임시직 고용은 대체로 청년노동자,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제와 임시직은 고용의 불안정성이라는 노동시장의 특성 이외에도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끝으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구조적인 경기침체와 실업문제이다. 2차대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에 가까울 만큼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던 서구 자본주의경제는 1970년대 중반을 계기로 경제침체가 구조화, 지속화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각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4%대를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록셈부르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2%대로 둔화되었고, 1990년대 전반기에는 다시 0~1%대로 하락하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나라들도 있었다.⁸⁾ 1990년대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2~3%대로 다시 회복되었으나 1970년대 이전의 호황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경제성장에 머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경제침체의 영향은 고실업으로 나타난다. 1980년대 초반에는 국가에 따라 2~7%대에 그치던 실업률은 1990년대 중반에는 몇몇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10%에 가깝거나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의 경제회복기에 실업률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00년 현재 주요국가의 실업률은 7~10%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OECD, 2002b). 이와 같은 고실업도 문제지만 장기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노동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 전체 실업자 가운데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2000년 사이에 24.5%에서 47.5%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비유럽국가에서도 장기실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오스트레일리아는 같은 기간 중 19.8%에서 29.4%로, 캐나다는 3.8%에서 11.6%로 증가하였다.⁹⁾ 유럽연합에서는 2000년 현재 1,400만에 이르는 전체 실업자의 절반가량이 장기실업상태에 있어 빈곤과 사회적 배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 즉 노인인구 및 한부모가구의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경제의 세계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및 구조적인 경제침체와 고실업의 지속 등은 대부분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서구 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것인 만큼 빈곤과 불평등의 추세 역시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빈곤과 불평등의 추세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 이외에도 소득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제도와 정책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8)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비유럽국가들은 1980~1990년대 중반에도 2~4%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9) 서구국가 가운데는 미국만이 1980년 4.3%에서 1999년 6.8%로 장기실업률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 또한 사회제도의 변화는 구조적 변화와는 달리 각 나라의 정치적, 이념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므로 빈곤과 불평등의 추세 역시 나라마다 다소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빈곤의 국제비교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소속 회원국들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토대로 국가 간 소득불평 등 비교자료를 처음 발간한 것(Sawyer, 1976)이 불과 30년이 채 안된 일일 정도로,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실태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는 자료의 제약이라는 결정적인 한계로 인해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각국의 소득조사자료를 종합하고 통일된 소득항목별로 재분류하여 국가간에 비교가 가능한 국제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룩셈부르크소득연구(Luxembourg Income Study, LIS)의 자료를 이용하여 오늘날에는 많은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분야의 초기연구들은 빈곤의 실태를 국가간에 비교하는 기술적 목적에 초점을 두었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구 복지국가들 사이에도 빈곤의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Atkinson et al., 1995; Förster, 1993; Mitchell, 1991). 전반적으로 볼 때 스칸디나비아국가와 덴마크, 네덜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의 빈곤정도는 매우 낮는데 비해 영미권의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빈곤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발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심은 왜 경제발전의 정도가 유사한 서구국가들 간에 빈곤의 실태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관한 의문이었다.

빈곤의 국가간 편차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은 흔히 제도적 요인에 주목한다. 이 설명에 의하면 서구자본주의국가는 경제나 노동시장 등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으나 소득보장 및 재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빈곤실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Förster(1993)는 13개국의 사회보장비(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와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 둘 사이에는 매우 높은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즉, 사회보장비지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빈곤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가구소득을 소득원에 따라 시장소득과 가치분소득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한다. 시장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시장경제활동을 통해 얻어진 소득을 말하며, 시장소득에서 조세납부액을 제하고 사회보장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것이 가치분소득이다. 여기에서 시장소득과 가치분소득의 차이(조세와 공적소득이전)는 정부개입에 의한 소득재분배(빈곤완화)효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따른 연구들은 공적소득이전의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그리고 이것이 저소득층에게 주로 집중되어 있을수록 재분배효과가 높고 따라서 최종(가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빈곤의 정도가 낮아진다고 한다(Cantillon, et al., 2002; Mitchell, 1991; Smeeding, 2002).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수가 적거나 임금불평등이 덜 심한 나라일수록 가치분소득의 빈곤(불평등) 역시 낮아진다고 한다(Smeeding, 2002). 예를 들어 Mitchell은 10개국의 LIS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회귀모

형을 산출한 바 있다(Mitchell, 1991).

$$P_{post}=9.89-1.64*Generosity-0.13*Efficiency \quad R^2=0.72 \quad (1)$$

$$P_{post}=-0.09+1.02*P_{pre}-0.99*ESS/GDP \quad R^2=0.98 \quad (2)$$

P_{post} : 가처분소득의 빈곤 P_{pre} : 시장소득의 빈곤

Generosity: 공적소득이전의 전체규모

Efficiency: 공적이전소득 중 실제로 빈곤완화에 기여한 부분

ESS(Effective Social Expenditure): 빈곤완화에 기여한 사회보장비(공적소득이전) 지출액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법은 이른바 순환론적 오류(tautology)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적소득이전의 재분배효과(원인)가 높을수록 가처분소득의 빈곤(결과)이 낮아지는 것은 서로 다른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 그 자체로 인해 반드시 관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식 (2)에 포함된 종속변수와 두 개의 독립변수의 정의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의 빈곤(P_{post})=시장소득의 빈곤(P_{pre})-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ESS/GDP)라는 관계는 통계적으로 추정할 인과관계에 의한 영향력이 아니라 변수의 정의로 인해 항상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¹⁰⁾

따라서 위와 같은 독립변수(시장소득의 빈곤, 공적소득이전 등)들이 빈곤의 국가간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보다 더욱 의미 있는 주제는 빈곤의 국가간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각각의 요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문제를 다룬 실증연구들은 국가간의 빈곤 편차의 1/3(Kangas and Ritakallio, 2000) 내지 절반(Kim, 2000) 정도는 공적소득이전의 재분배효과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나머지는 인구 및 노동시장 등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소득연구 데이터베이스가 처음 구축된 이래 1990년대까지 빈곤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는 주로 한 시점에서의 횡단연구에 치우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도의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됨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는 시계열적으로 빈곤의 추세를 비교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볼 때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서구 국가에서 빈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구분하여 불평등과 빈곤의 추세를 연구한 결과들은 시장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Acemoglu, 2002; Förster and Pearson, 2002; Kim, 2000; Ritakallio, 2001; Smeeding, 2002). 그러나 이러한 공통적인 현상 속에서도 각 나라의 빈곤증가 속도 및 정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왜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추세에 있어서 국가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빈곤의 변화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제2절에서 언급한 인구구조, 경제환경, 노동시장 등 경제사회적 변화요인

10) 즉, $P_{post}=P_{pre}-ESS/GDP$ 는 항상 참이라는 것이다. Mitchell의 회귀모형추정에서 각 회귀계수의 값이 1과 -1에 매우 가깝고 R^2 역시 1에 가까운 높은 값으로 나타난 것은 이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변수들의 정의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 값들은 모두 1(또는 -1)이 되었을 것이다.

과 빈곤의 추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여 왔다. 예를 들어 Cantillon et al.(2002)의 연구는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중반의 고용(실업)변화와 빈곤율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용과 빈곤의 변화경향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웨덴과 이탈리아는 이 기간 중에 고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빈곤율이 다소(스웨덴) 또는 크게(이탈리아) 증가한데 비해, 네덜란드와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 고용의 증가가 빈곤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 연구자들은 고용증가로 인해 실업 내지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는 대신 중산층 이상 가구의 제2소득자가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Cantillon et al., 2002). 이와 같은 현상을 Gregg and Wadsworth(1996)는 ‘고용의 양극화(employment polarization)’라고 명명한 바 있는데, 이는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서구국가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제2절의 추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Ritakallio(2001)는 전체가구를 가구구성(단독가구, 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 편부모가구, 노인가구 등), 자녀의 수, 가구의 연령(18~29세, 30~64세, 65세 이상) 등에 따라 몇 개의 하위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 하위집단에 따라서 빈곤의 변화추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컨대 분석에 포함된 모든 나라들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18~29세의 빈곤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성인가구의 취업상태별로 빈곤율의 변화추세를 비교하여 성인가구원 전체가 취업하고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큰 변화가 없으나 비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발견하였다.

Förster and Pearson(2002)은 OECD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에 걸친 빈곤과 불평등의 변화추세를 분석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평등이 증가한데 비해 빈곤은 국가에 따라 증가, 정체, 또는 감소하여 일률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¹¹⁾ 이 연구에서는 또한 연령별, 가구구성(혼인상태 및 자녀유무)별로 소득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빈곤의 변화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요인과 제도적 변화요인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생산연령층 인구를 대상으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석된 13개국 모두에서 시장소득의 빈곤이 증가한데 비해, 가처분소득 빈곤은 8개국에서 증가하고 나머지 5개국에서는 소폭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경제 및 노동시장구조의 변화가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빈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처하는 공적소득이전의 재분배(빈곤완화) 기능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빈곤의 변화추세와 그 요인에 관해 부분적인 설명이나 함의를 제공할 뿐 전체적인 빈곤의 변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빈곤이 증가한 경우라면 이것이 노인이나 편부모 등 빈곤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인구집단 내에서 빈곤이 심화되었기 때문인지, 또 각 인구집단의 빈곤의 변화에는 경제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요인과 공적소득이전의 제도적 변화요인 중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불분명한 것이다.¹²⁾ 이러

11) 전체 20개국 가운데 6개국에서는 빈곤이 감소한데 비해 5개 국가는 빈곤의 증가를 나타내었고, 나머지 9개국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사회의 빈곤(과 그 변화량)을 인구집단별로 분해하여 각각의 인구 집단의 구성비율과 빈곤정도가 전체 빈곤(변화량)에 미치는 영향력(기여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분석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4. 분석방법 및 자료

본 연구는 최근 서구 북지국가에서 빈곤의 변화추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한 자료로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LIS)에 포함된 국가별 가구소득조사자료가 사용되었다. 룩셈부르크소득연구는 대부분의 서구국가와 일부동유럽국가, 그리고 이스라엘과 멕시코 등 현재 총 29개국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각국의 자료는 조사시기별로 제1주기(Wave I, 1980년경)~제5주기(Wave V, 2000년경)로 구분되는데 현재 일부국가의 제5주기 자료는 수록작업 중에 있어 분석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LIS에 포함된 29개국 가운데 비서구국가와 제5주기 자료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개국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¹²⁾

가구단위의 소득자료로부터 한 나라 전체의 빈곤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¹⁴⁾ 먼저 가구규모에 따른 생활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가구 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가 제안한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였다(Citro and Michael, 1995). 이 균등화지수는 기존에 제시된 수십 개의 균등화지수를 비교, 검토하여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고안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산출된다.

$$\text{Equivalence scale}=(A+0.7C)^{0.7}$$

A: 성인의 수, C: 아동의 수

한편, 빈곤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전체가구의 중위소득(균등화소득)의 50%를 각국의 연도별 빈곤선으로 정의하였다. 빈곤선을 이처럼 상대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시계열적으로 빈곤을 비교할 때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¹⁵⁾ 국민소득수준이 서로 다르고 국제적 혹은 각국의 공식

12) 이에 더하여 빈곤의 측정방법 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빈곤율을 기준으로 시장소득의 빈곤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을 측정하였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방법은 몇 가지 중요한 약점을 Förster and Pearson(2002)은 이에 더하여 빈곤자의 평균소득(빈곤갭)을 이용하였지만 이것 역시 빈곤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자들의 평균소득이 증가하면 빈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13)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0개국이다.

14) 이외에도 가족과 가구의 구분문제, 총소득(또는 가처분소득)이 0 미만인 사례에 대한 처리문제 등 아주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15) 상대적 빈곤선을 채택할 경우 예를 들어 A국이 1990년~2000년 사이에 실질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적인 빈곤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 접근방법은 국제비교연구를 위해 흔히 사용되며 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통계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다.

끝으로, 빈곤지수를 선택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빈곤지수는 빈곤율, 즉 빈곤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러나 빈곤율은 빈곤의 규모와 변화추세를 시간적 혹은 국가간에 비교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빈곤율은 주어진 빈곤선을 기준으로 각 가구(개인)의 소득이 이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만 고려하기 때문에 빈곤선을 어디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임의로 중위소득의 50%라는 빈곤선을 정할 경우에, 빈곤선 설정의 자의성이 주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율과 같이 빈곤선에 민감한 지수를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빈곤율은 빈곤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정의할 뿐 빈곤의 정도(또는 심각성)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빈곤율과 함께 비교적 널리 사용되는 빈곤지수인 빈곤갭은 빈곤율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는 있지만 역시 그 나름의 한계를 가진다. 빈곤갭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빈곤한 사람들 간의 소득불평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빈곤선이 50만원이고 A, B 두 사람의 소득이 각각 10만원과 40만원이라고 하자. 만약 A로부터 B에게로 10만원의 소득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A, B의 소득은 각각 0원과 50만원이 된다. 이 때 빈곤갭을 기준으로 소득이전의 효과를 측정한다면 소득이전 전후 빈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¹⁶⁾ 그러나 이러한 소득이전(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으로부터 소득이 높은 사람으로의 소득이전)이 있을 경우 빈곤은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빈곤자 가운데에서 역직적인 소득이전이 있으면 빈곤은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Sen(1976)이 말한 이른바 이전의 공리(transfer axiom)이다. 빈곤지수가 이전의 공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빈곤한 사람 가운데 더욱 소득이 낮은 사람에 대해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방법으로 빈곤지수가 계산되어야 한다. 예컨대 Sen(1976)이 제시한 빈곤지수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되는데 여기에서 $(q+1-i)$ 가 소득분배 상의 서열의 역순으로 가중치를 준 것이다.¹⁷⁾

$$P_{SEN} = \frac{2}{(q+1)nz} \sum_{i=1}^q (z - y_i)(q+1-i)$$

y_i : i 번째 가구(개인)의 소득, q : 빈곤인구, n : 전체인구, z : 빈곤선

Sen의 지수는 빈곤인구의 규모(빈곤율)와 빈곤의 정도(빈곤갭)는 물론, 빈곤인구 간의 소득불평등

국민소득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분배상태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빈곤에도 변화가 없게 된다.

16) 만약 빈곤율을 이용한다면 A→B의 소득이전은 빈곤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7) 예를 들어 빈곤인구가 100명이라면 그 가운데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100, 그 다음 사람에게 99등으로 가중치를 준 것이다.

까지도 반영함으로써 빈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본 연구를 위해서는 한 사회(국가) 전체의 빈곤을 하위집단별로 분해(decomposition)하는 것이 필요한데, Sen의 지수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¹⁸⁾ Sen지수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하위집단별로 분해가 가능한 빈곤지수로는 Foster, Greer and Thorbecke(1984)가 제안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빈곤지수(P_{FGT})는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P_{FGT} = \frac{1}{nz^\alpha} \sum_{i=1}^g (z - y_i)^\alpha$$

P_{FGT} 는 α 의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alpha=0$ 일 때는 빈곤율과 같고 $\alpha=1$ 일 때는 빈곤갭을 (전체인구×빈곤선)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 된다. α 의 값을 2 이상으로 줄 때 P_{FGT} 는 Sen지수와 마찬가지로 빈곤율과 빈곤갭, 빈곤인구 간의 소득불평등을 반영한 지수가 되는데 α 의 값이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는 셈이 된다. 한편, P_{FGT} 는 Sen지수처럼 서열적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고 각 가구의 빈곤갭(빈곤선과 실제소득과의 차이) 그 자체를 가중치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빈곤을 하위집단별로 분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즉, 전체인구(n)의 소득분배상태(y)가 m 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누어지고 각 하위집단의 소득분배상태를 $y^{(j)}$ 라고 한다면 P_{FGT}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Foster, et al., 1984).

$$P_\alpha(y; z) = \sum_{j=1}^m \frac{n_j}{n} P_\alpha(y^{(j)}; z) \quad 19)$$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을 포함하여 빈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α 의 값을 2로 준 P_{FGT} 를 주로 사용하였다.²⁰⁾ 먼저, 룩셈부르크소득연구의 가구소득자료로부터 각국의 연도별 빈곤지수를 산출하여 1980~2000년 사이에 빈곤추세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가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빈곤의 변화추세에 어떠한 요인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곤지수를 하위인구집단과 소득원별로 분해하여 비교하였다.²¹⁾ 소득원별 분해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개념을 이용하였으며, 인구집단별로는 제2절의 논의를 고려하여 가구의 특성을 기준으로 노인가구, 편부모가구, 생산연령층(15~64세) 가구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빈곤지수를 분해하면 인구구성의 변화, 인구집단별 시장소득빈곤의 변화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변화 등의 요인

18) 이는 Sen지수가 소득분배 상의 서열, 즉 서수적 가중치를 사용하는 데서 기인한다.

19) 빈곤율(P_{FGT} , $\alpha=0$)을 예로 들자면 전체인구의 빈곤율은 각 하위집단의 빈곤율을 하위집단인구의 비율로 가중합한 것이 된다.

20) 이러한 종합적인 빈곤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빈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빈곤이 증가하였다면 이것이 빈곤인구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빈곤자들의 소득이 감소(빈곤갭이 증가)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빈곤인구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했기 때문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빈곤갭과 같은 다른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의 논의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 빈곤갭을 사용한 결과는 <부표>에 요약되어 있다.

21) 일부국가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소득원이나 인구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누락되어 있어서 모든 연도에 대해 빈곤지수의 분해가 가능하지는 않았다.

이 전체사회의 빈곤변화에 각각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²²⁾

5. 분석결과 및 논의

<표 1>은 분석에 포함된 10개 서구 복지국가의 제1주기~제5주기(1980년경~2000년경)의 빈곤추세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2000년을 전후한 제5주기의 자료를 횡단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빈곤이 심한 나라로 나타났으며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는 중간층을 이루고 있고, 핀란드와 룩셈부르크가 가장 낮은 빈곤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네덜란드의 경우만 제외하면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네덜란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빈곤을 나타내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가 캐나다나 영국에 비해 빈곤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분석자료의 시간적 차이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빈곤지수를 사용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먼저 많은 선행연구가 분석대상으로 한 1980년대에 네덜란드는 비교적 낮은 빈곤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다른 나라에 비해 빈곤이 급격하게 심화되었다. 또한 빈곤인구만을 놓고 본다면 네덜란드는 2000년에도 영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낮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빈곤갭과 빈곤자 간의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여 $P_{FGT}(a=2)$ 로 측정된 빈곤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빈곤의 추세를 본다면 가장 주목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네덜란드는 1980년경에 P_{FGT} 가 0.530%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경에는 2.034%로 약 4배 가량 빈곤이 심화되었고, 그 외의 국가도 대부분 빈곤지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은 1990년대 중반까지 빈곤이 심화되다가 1990년대 후반기에 빈곤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1980년대 초(혹은 중반)와 2000년경을 비교하면 빈곤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 비해 빈곤지수가 감소한 나라는 핀란드와 룩셈부르크의 2개국에 불과하며,²³⁾ 미국과 캐나다는 연도에 따라 다소간의 등락은 있지만 대체로 큰 변화 없이 고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22) 생산연령층가구를 다시 가구주(원)의 경제활동유형별(고용형태, 직업, 직종 등)로 분류하여 빈곤지수를 분해하면 빈곤의 변화가 실업 또는 임시직 고용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 하락으로 인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LIS자료에 있는 관련변수들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LIS자료와 고용관련자료(Luxembourg Employment Study, LES)의 연계·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23) 룩셈부르크의 경우 P_{FGT} 는 1980년대 중반 0.305%에서 2000년에는 0.221%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빈곤율은 45%에서 5.9%로 증가하였다. 즉, 빈곤인구는 늘어났지만, 빈곤자의 평균 소득이 증가하거나 소득분배상의 불평등이 개선되어 빈곤지수가 낮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 서구 복지국가의 빈곤 추세: 1980~2000

	Wave I 1980년경	Wave II 1985년경	Wave III 1990년경	Wave IV 1995년경	Wave V 2000년경
캐나다	1.572 (11.4)	1.279 (10.4)	1.126 (10.0)	1.614 (11.2)	1.375 (10.4)
핀란드		0.425 (4.2)	0.435 (4.3)	0.229 (2.8)	0.346 (3.9)
독일	0.581 (4.7)	0.883 (6.7)	0.697 (5.0)	1.031 (7.0)	0.914 (7.2)
이탈리아		1.169 (10.4)	0.934 (9.3)	2.170 (13.5)	2.009 (12.5)
룩셈부르크		0.305 (4.5)	0.093 (3.4)	0.349 (5.8)	0.221 (5.9)
네덜란드	0.530 (3.5)	0.606 (3.8)	1.174 (5.0)	2.015 (7.1)	2.034 (7.8)
노르웨이	0.677 (4.1)	0.546 (5.0)	0.616 (3.9)	0.816 (5.1)	0.735 (4.3)
스웨덴	0.705 (4.5)	1.135 (6.1)	1.117 (5.6)	1.514 (5.7)	0.804 (5.4)
영국	0.752 (7.1)	1.328 (7.6)	1.219 (13.1)	1.680 (11.7)	1.099 (10.9)
미국	2.410 (15.1)	2.874 (17.6)	2.798 (17.2)	2.729 (16.2)	2.641 (16.5)

* 각 칸의 수치는 $\alpha=2$ 로 계산된 P_{FGI} 이며 괄호안의 수치는 $\alpha=2$ 로 계산된 $P_{FGI}(\alpha=0)$, 즉 빈곤율임(양 수치는 모두 100을 곱하여 퍼센트로 표기되었음)

<표 2>는 시장소득의 빈곤추세를 정리한 것으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표 1>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제5주기의 자료를 횡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핀란드가 가장 낮으며, 캐나다와 미국의 빈곤수준 역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영국은 $P_{FGI}=20.212\%$ 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빈곤수준을 보이고 있고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도 다른 나라에 비해 시장소득의 빈곤이 높은 수준이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독일과 스웨덴이 중간 정도의,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가장 낮은 빈곤수준을 나타내는데 반해 이들 나라의 시장소득 빈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이 국가들에서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가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과 캐나다는 시장소득의 빈곤이 매우 낮은 수준이나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가 미약하여 가처분소득의 빈곤은 가장 심한 나라에 속한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시장소득의 빈곤변화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는 나라가 많다.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의 다섯 나라에서 대체로 시장소득 빈곤이 심화되는 경향이 발견되며,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미국 등은 연도에 따라 다소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는 시장소득빈곤이 심화되다가 1990년에 정점에 달한 후 감소추세를 보여, 2000년에는 1980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였다. 네덜란드는 시장소득 빈곤이 감소한 유

일한 나라로 1980년 P_{FGT} 가 17.064%에서 2000년에는 11.699%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시장소득 빈곤율은 22.5%에서 21.2%로 미미하게 감소한데 그쳤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P_{FGT}(\alpha=2)$ 가 크게 하락한 것은 빈곤인구가 감소한 때문이라기보다는 빈곤자의 평균소득수준(빈곤갭)이 증가하였거나 빈곤자 간의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표 2> 시장소득의 빈곤추세: 1980~2000

	Wave I 1980년경	Wave II 1985년경	Wave III 1990년경	Wave IV 1995년경	Wave V 2000년경
캐나다	8.865 (19.5)	9.347 (20.5)	10.604 (22.3)	12.079 (23.6)	9.540 (20.8)
핀란드		4.780 (15.2)	4.668 (14.9)	7.891 (19.6)	6.887 (17.3)
독일	15.307 (19.6)	18.952 (24.7)	13.176 (19.9)	16.224 (25.3)	18.127 (27.9)
이탈리아			13.881 (25.1)	17.247 (31.8)	17.802 (30.9)
룩셈부르크			13.439 (26.3)	14.933 (29.9)	13.466 (29.0)
네덜란드	17.064 (22.5)	17.422 (22.1)	13.801 (21.9)	15.557 (24.3)	11.699 (21.2)
노르웨이	11.421 (19.5)	10.385 (18.3)	10.048 (20.4)	12.404 (24.3)	11.353 (22.8)
스웨덴	15.852 (27.4)	16.317 (28.7)	19.989 (34.1)	17.072 (33.2)	15.045 (28.4)
영국	13.381 (21.7)	19.467 (29.9)	17.838 (27.6)	21.046 (31.4)	20.212 (30.9)
미국	10.142 (21.1)	11.319 (22.6)	11.759 (24.4)	11.477 (23.9)	9.897 (22.9)

<표 3>은 1980(1985)~2000년 사이에 시장소득빈곤과 가처분소득빈곤의 변화방향에 따라 국가들을 분류한 것이다.²⁴⁾ 먼저 이 기간 중에 시장소득의 빈곤이 감소한 나라는 네덜란드가 유일하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시장소득빈곤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가 크게 축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처분소득의 빈곤은 오히려 심화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시장소득의 빈곤에 거의 변화가 없는 나라는 미국,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세 나라인데, 이 중 미국은 가처분소득의 빈곤 역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가 다소 약화됨에 따라 가처분소득의 빈곤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머지 네 나라에서는 시장소득의 빈곤이 심화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 독일과 영국은 가처분소득의 빈곤 역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소득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가 강화됨으로써 가처분

24) 이탈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제2주기까지 소득원별로 구분하지 않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자료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어서 이 표 및 <표 5>과 <표 6>에서 제외하였다.

소득의 빈곤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거나(캐나다) 오히려 감소하는(핀란드) 나라도 있었다.

<표 3>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의 변화방향에 따른 국가 분류

		가처분소득의 빈곤		
		감소	동일	증가
시장소득의 빈곤	감소			네덜란드
	동일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증가	핀란드	캐나다	독일, 영국

<표 4>는 가처분소득의 빈곤을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해한 것이다. 제4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체인구의 빈곤지수는 각 인구집단의 빈곤지수를 인구구성비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합산한 것이 된다. <표 4>에서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구주가 생산연령(18~64세)대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편부모가구와 노인가구 등 경제활동참가가 어려운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에 속하는 인구비율은 이탈리아가 1991년 19.9%에서 2000년에 23.1%로 3.2% 포인트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1~3% 포인트 정도 증가하였고, 예외적으로 스웨덴만 소폭(0.7% 포인트) 감소하였다. 노인가구에 비해 편부모가구는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편부모가구의 인구비율은 스웨덴이 1981년 5.7%에서 2000년 18.4%로 12.7% 포인트나 증가하였으며 그 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4~8% 포인트 가량 증가하였다. 이탈리아와 룩셈부르크에서는 편부모가구의 인구비율이 0.2~0.6 포인트의 소폭으로 증가한데 그쳤으며, 미국만이 근소하지만 편부모가구 인구비율이 감소한 유일한 나라였다.

그러나 노령층과 편부모가구의 증가추세가 반드시 빈곤의 증가를 야기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생산연령층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의 빈곤 위험이 더 클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독일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노인가구는 생산연령층가구에 비해 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2000년에 생산연령층가구의 빈곤지수가 각각 1.146, 0.930인데 비해 노인가구의 빈곤지수는 이의 1/7~1/8에 불과한 0.162, 0.113에 그쳤다. 다른 나라에서도 노인가구의 빈곤지수는 생산연령층가구의 빈곤지수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빈곤의 추세를 살펴보아도 노인가구의 빈곤이 반드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에 비해 2000년에 노인가구의 빈곤이 크게 증가한 나라는 영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에 불과할 뿐 스웨덴, 핀란드, 미국 등에서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고 나머지 다섯 나라에서는 오히려 노인가구의 빈곤이 감소하였다. 노인가구의 빈곤추세와 관련하여 가장 대비되는 두 나라는 노르웨이와 영국인데 1979~2000년 사이 노르웨이의 노인빈곤은 1.164에서 0.113으로 1/10 이하의 규모로 감소한데 비해 영국의 노인빈곤은 0.215에서 1.043으로 5배나 증가하였다.

노인가구의 빈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반해 편부모가구의 빈곤정도는 생산연령층 일반가구에 비해 대체로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2000년에 일반가구의 빈곤지수가 2.306인데 비해 편부모가구의 빈곤지수는 6.571로 세 배 가량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편

부모가구의 빈곤이 일반가구의 2~3배 수준으로 높았다. 다만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두 나라는 1980년 경만 하더라도 편부모가구의 빈곤이 일반가구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일반가구의 빈곤이 증가한 반면 편부모가구의 빈곤은 크게 감소하여 2000년에는 편부모가구의 빈곤이 일반가구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이외에도 캐나다,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편부모가구의 빈곤수준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 세 나라에서는 편부모가구의 빈곤이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표 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처분소득 빈곤의 변화

국명	연도	생산연령(18~64세)가구		편부모가구		노인가구		전체 빈곤지수
		구성비(%)	빈곤지수	구성비(%)	빈곤지수	구성비(%)	빈곤지수	
캐나다	1987	82.4	1.123	5.8	5.234	11.8	0.417	1.279
	2000	75.0	1.472	12.4	1.870	12.6	0.308	1.375
핀란드	1987	80.4	0.474	7.6	0.386	12.0	0.121	0.425
	2000	72.1	0.361	12.8	0.391	15.1	0.242	0.346
독일	1984	79.4	0.727	3.5	2.534	17.1	1.275	0.883
	2000	73.2	0.853	7.0	1.640	19.8	0.883	0.914
이탈리아	1991	77.8	0.976	2.3	3.116	19.9	0.517	0.934
	2000	74.4	2.219	2.5	4.873	23.1	1.017	2.009
룩셈부르크	1991	82.3	0.256	5.1	1.345	12.7	0.208	0.305
	2000	78.8	0.220	5.7	0.654	15.6	0.072	0.221
네덜란드	1983	83.0	0.487	4.2	0.354	12.9	0.867	0.530
	1999	77.5	2.149	8.4	3.167	14.1	0.738	2.034
노르웨이	1979	74.5	0.507	9.3	1.194	16.2	1.164	0.677
	2000	66.2	0.930	16.5	0.599	17.2	0.113	0.735
스웨덴	1981	75.4	0.824	5.7	1.425	18.9	0.012	0.705
	2000	63.4	1.146	18.4	0.259	18.2	0.162	0.804
영국	1979	78.4	0.868	5.5	0.674	16.1	0.215	0.752
	2000	69.2	1.103	13.5	1.153	17.3	1.043	1.099
미국	1986	74.5	1.936	11.9	9.274	13.6	2.424	2.874
	2000	74.5	2.036	11.2	6.571	14.3	2.699	2.641

한편, 생산연령층 일반가구의 빈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핀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만 생산연령인구의 빈곤이 소폭 감소하였을 뿐, 다른 8개국에서는 빈곤지수가 증가하였고 특히 네덜란드(0.487→2.149)와 이탈리아(0.976→2.219)의 생산연령층 빈곤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생산연령층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제2절에서 언급하였던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임금불평 등의 심화 등 노동시장구조의 변화가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비해 이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완화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는 각 인구집단별 시장소득의 변화추세를 요약한 것이다. 이를 가처분소득의 변화추세를 나타내는 <표 4>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다른 차이가 몇 가지 발견된다. 먼저, 시장소득의 빈곤은 모든 인구집단에서 가처분소득의 빈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특히 노인가구의 경우 시장소득의 빈곤지수는 2000년 현재 국가별로 30~55 정도로서 가처분소득의 빈곤지수 0.1~2.7의 수십 배

이상에 이르는 규모이다.²⁵⁾ 이러한 차이는 공적이전소득이 저소득 노인가구의 최저생활보장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지수를 비교하여 보면 공적소득이전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91.5%(미국)~99.7%(노르웨이)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편부모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지수는 영국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8~18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노인가구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가처분소득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편부모가구의 경우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는 국가별로 59.0%(미국)~96.8%(핀란드)에 이른다. 생산연령층 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지수는 5~10 사이로 인구집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국가별 편차도 크지 않다. 생산연령층 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을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노인이나 편부모가구에 비해서는 빈곤완화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표 5> 인구집단별 시장소득 빈곤의 변화 추세

	생산연령층 가구		편부모가구		노인가구	
	1980년대	2000년	1980년대	2000년	1980년대	2000년
캐나다	4.649	5.380	30.623	14.790	31.626	29.171
핀란드	2.484	5.672	4.559	12.053	20.307	8.323
독일	6.938	7.927	25.468	18.595	73.452	55.734
네덜란드	10.911	7.461	55.456	18.012	44.355	31.217
노르웨이	3.025	5.678	15.875	8.115	47.373	36.254
스웨덴	5.319	8.924	17.279	8.151	57.437	43.335
영국	5.683	10.404	25.151	42.815	46.743	41.740
미국	4.597	4.889	30.031	15.184	31.773	31.844

한편, 시장소득빈곤의 변화추세는 인구집단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노인인구의 시장소득빈곤은 미국의 경우만 거의 변화가 없을 뿐 나머지 7개 국가에서는 감소하였다. 노령층의 시장소득빈곤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은 연금을 비롯한 공적소득이전 이외에 스스로 노후 생활에 대처하여 근로활동을 지속하거나 저축 등을 통해 이자소득을 확보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령인구와 마찬가지로 편부모가구의 시장소득빈곤도 대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개국 중 6개국에서 편부모가구의 시장소득빈곤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특히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큰 감소폭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핀란드와 영국 두 나라에서는 편부모가구의 시장소득빈곤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국가에 따라 편부모가구의 시장소득빈곤추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적절성과 관대성 및 노동관련 자격요건, 수요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구조, 공공(민간)택사서비스의 적절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편부모가구의

25) 핀란드만 노인가구의 시장소득빈곤지수가 8.323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가처분소득빈곤지수 0.242에 비하면 30배 이상의 규모이다.

시장소득빈곤이 낮으면서도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 나라에서 공공택아 서비스, 유급 출산/육아휴가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인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경우 1986년 30.031, 1991년 30.468로 1990년대 초반까지 높은 수준에 머무르던 편부모가구의 빈곤도가 1994년 24.042, 2000년 15.184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기간 중에 있었던 복지개혁의 영향으로 과거 공적소득이전에 크게 의존하던 편부모가구의 노동시장참여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노령층과 편부모가구의 시장소득빈곤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생산연령인구의 시장소득빈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과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1.5~2배 이상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생산연령층의 시장소득빈곤이 증가하는 추세는 경제와 노동시장구조가 이 계층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6>은 1980년대~2000년 사이 각국의 빈곤변화를 인구집단별, 소득원별로 분해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먼저 전체빈곤의 변화를 살펴보면 핀란드와 미국 두 나라에서만 빈곤이 감소한데 비해 나머지 6개국에서는 빈곤이 증가하였다. 네덜란드가 1980년대 빈곤지수 0.530에서 2000년에는 2.034로 150.4%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영국에서도 빈곤이 크게 심화되었다. 그 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에서도 빈곤이 다소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전체빈곤 및 인구집단별 소득원별 빈곤의 변화 동향

	생산연령층 가구			편부모 가구			노인 가구			전체
	시장소득 빈곤	빈곤완화 효과	가처분소득 빈곤	시장소득 빈곤	빈곤완화 효과	가처분소득 빈곤	시장소득 빈곤	빈곤완화 효과	가처분소득 빈곤	
캐나다	△0.207	△0.027	△0.180	△0.048	△0.122	▼0.074	▼0.063	▼0.052	▼0.011	△0.096
핀란드	△2.094	△2.215	▼0.121	△1.191	△1.171	△0.020	▼1.178	▼1.200	△0.022	▼0.078
독일	△0.290	△0.244	△0.046	△0.428	△0.400	△0.028	▼1.538	▼1.495	▼0.043	△0.030
네덜란드	▼3.271	▼4.532	△1.261	▼0.797	▼1.047	△0.250	▼1.297	▼1.289	▼0.009	△1.504
노르웨이	△1.507	△1.268	△0.239	▼0.127	▼0.116	▼0.011	▼1.447	▼1.278	▼0.169	△0.057
스웨덴	△1.649	△1.543	△0.106	△0.511	△0.545	▼0.034	▼2.967	▼2.994	△0.027	△0.099
영국	△2.741	△2.658	△0.083	△4.400	△4.281	△0.119	▼0.310	▼0.456	△0.146	△0.348
미국	△0.216	△0.143	△0.073	▼1.858	▼1.495	▼0.363	△0.219	△0.164	△0.055	▼0.233

* 각 수치는 1980년대 초(또는 중반)~2000년간의 인구집단별 가중빈곤지수(인구구성비× $P_{PGR,a=2}$)의 변화량임. 빈곤완화효과는 시장소득빈곤과 가처분소득빈곤간의 차이로 정의되었음. 마지막 열은 전체인구의 가처분소득빈곤의 변화량임.

인구집단별로는 먼저 노인가구의 경우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시장소득 빈곤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함께 노인가구에 대한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사실 또한 주목하여야 한다.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의 변화방향은 시장소득빈곤의 변화방향과 완전히 일치하는 현상을 보인다. 즉, 노인가구의 시장소득빈곤이 감소한 나라에서는 공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 역시 감소함으로써 최종소득(가처분소득) 빈곤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결과가 되었다. 반대로 노인가구의 시장소득빈곤이 증가한 나라라 하더라도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가 따라서 증가함으로써 최종소득의 빈곤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인가구에 대한 공적소득이전제도는 시장소득 빈곤의 감소(증가)효과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소득이전이 시장소득 빈곤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정도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시장소득 빈곤의 감소폭이 이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노인가구의 빈곤이 0.169 포인트 감소하였다.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르웨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노인가구의 빈곤이 감소한 나라들이다. 이와는 달리 스웨덴과 핀란드는 노인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가 이보다 더 크게 축소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인가구의 빈곤은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미국은 노인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이 증가한 유일한 나라이데,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도 비록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시장소득 빈곤의 증가량에 미치지 못하여 노인가구의 빈곤이 다소 증가하였다.

편부모가구의 빈곤은 변화의 폭과 방향에 있어서 국가간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우선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면 빈곤이 증가한 나라가 5개국, 감소한 나라가 3개국이었다. 영국은 1980~2000년 사이에 편부모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이 무려 4.400 포인트 증가하였고,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도 비교적 높은 증가를 기록하였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편부모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노르웨이에서도 소폭 감소하였다.

편부모가구의 가처분소득 빈곤은 시장소득 빈곤의 변화방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즉, 시장소득 빈곤이 증가한 나라에서는 가처분소득의 빈곤 역시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가처분소득의 빈곤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가 시장소득의 변화방향을 뒤집을 만큼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를 보이는 나라도 있는데, 스웨덴과 캐나다는 시장소득빈곤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게 증가하여 결국 편부모가구의 빈곤은 감소하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네덜란드는 시장소득 빈곤이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지만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편부모가구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편부모가구의 빈곤의 변화폭은 ▼0.363(미국)~△0.250(네덜란드)으로 노인가구의 ▼0.169(노르웨이)~△0.146(영국)에 비해 큰 편이다.

생산연령층 가구의 빈곤변화에서 주목할만한 특징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장소득 빈곤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영국이 △2.741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도 생산연령층 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캐나다, 독일, 미국은 비교적 소폭의 증가를 보였다. 다만 네덜란드는 ▼3.271로 생산연령층 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이 크게 감소하였다.

다른 인구집단과 마찬가지로 생산연령층 일반가구에 대해서도 공적소득이전제도는 시장소득 빈곤의 변화를 완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거의 모든 나라에서 생산연령층 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이 증

가하였으므로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 또한 증가함으로써 가처분소득 빈곤의 증가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의 증가량은 시장소득 빈곤의 증가량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가처분소득의 빈곤이 증가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단지 핀란드만이 시장소득 빈곤의 증가에 비해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가 더욱 크게 증가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의 빈곤이 감소되었다. 한편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시장소득 빈곤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는 이보다 더욱 크게 감소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의 빈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의 변화방향은 생산연령층가구의 빈곤 변화방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구구성에 있어서 생산연령층가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빈곤의 변화도 비교적 큰 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산연령층가구의 빈곤이 증가하였으므로 전체사회의 빈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는 생산연령층가구의 빈곤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다른 인구집단의 빈곤이 소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빈곤은 감소하였다. 미국은 생산연령층가구의 빈곤이 증가하였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았고, 편부모가구의 빈곤(특히 시장소득 빈곤)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 빈곤도 감소하게 되었다.

6. 결 론

본 연구는 1980년대 이래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의 세계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실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들이 빈곤의 동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에서 제공하는 각국의 가구소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빈곤지수를 산출하여 변화추세를 검토하는 한편, 생산연령층(18~64세)가구, 편부모가구, 노인가구 등 인구집단별로, 그리고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원별로 빈곤지수를 분해하여 빈곤의 변화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대체적으로 볼 때 서구 복지국가의 빈곤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Esping-Andersen의 분류를 따르자면 영국과 캐나다 등 자유주의복지국가와 독일을 비롯한 조합주의복지국가는 물론, 전통적으로 낮은 빈곤수준을 유지해 왔던 스웨덴, 노르웨이 등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에서도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980년대~2000년 사이에 빈곤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는 빈곤이 크게 증가한 나라들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중에서는 핀란드에서만 빈곤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빈곤수준을 기록하던 미국은 1980~1990년대 중반까지 빈곤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1990년대 후반기에 경제호황에 힘입어 빈곤이 다소 감소하였다.

이처럼 서구 복지국가의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노인인구나 편부모가구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인구집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모든 국가에서 이들 인구집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생산연령층에 비해 더 빈곤한 것은 아니다. 노령층의 경우 경

제활동의 축소 내지 중단으로 인해 비록 시장소득은 낮지만 연금제도를 비롯한 공적소득이전의 강력한 영향으로 인해 빈곤정도는 생산연령층에 비해 오히려 낮거나 적어도 비슷한 수준이다. 더욱이 1980년대 이래 노인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노인인구의 증가가 전체 사회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²⁶⁾

한편, 편부모가구는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빈곤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나라에서 편부모가구의 빈곤지수는 생산연령층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편부모가구의 빈곤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부모가구의 증가가 반드시 전체사회의 빈곤증가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영국과 유럽대륙국가에서는 편부모가구의 증가가 전체사회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나,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국가와 캐나다에서는 편부모가구에 대한 노동시장프로그램과 함께 공적소득이전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빈곤을 오히려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는 복지개혁을 통해 편부모가구에 대한 공적소득이전을 축소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노동활동을 장려, 강제함으로써 편부모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을 크게 감소시켰다.

서구 복지국가의 빈곤이 심화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생산연령층인구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거의 모든 나라에서 생산연령층의 시장소득 빈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임금불평등의 심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등 경제·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²⁷⁾ 생산연령층에 대해서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제도가 중요한 빈곤완화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다른 노인을 비롯한 다른 인구집단에 서만큼 크지 않다. 또한, 생산연령층의 시장소득 빈곤이 심화됨에 따라서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기능도 커지고 있는 추세이나 빈곤의 심화현상을 반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노령층의 빈곤이 생산연령층에 비해 덜 심각한 수준이며 복지국가의 빈곤심화요인이 주로 생산연령층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빈곤전략은 이 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및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관호 2003. 『세계화와 글로벌경제』. 서울: 박영사.

Acemoglu, D. 2002. "Cross-Country Inequality Trends." *LIS Working Paper #296*. Differdange, Luxembourg: CEPS/INSTEAD.

Atkinson, A. B. 1998. *Poverty in Europe*.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s.

Atkinson, A. B., L. Rainwater, and T. M. Smeeding. 1995.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Evidence*

26) 노인인구의 시장소득 빈곤이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즉 노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때문인지, 저축 등 사적인 노후준비가 많아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적소득이전이 증가하는 경향인지 등은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소득항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7) 제4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가운데 어떤 요인이 얼마만큼 빈곤의 심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경제활동 및 고용상태와 관련된 변수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Paris: OECD.
- Bradbury, B., and M. Jantti. 1999. "Child Poverty across Industrialized Nations." *LIS Working Paper #205*. Differdange, Luxembourg: CEPS/INSTEAD.
- Bumiaux, J., T. Dang, D. Fore, M. Forster, M. M. d'Ercole and H. Oxley. 1998.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Selected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189*. Paris: OECD.
- Citro, C. F., and R. T. Michael. 1995. *Measuring Poverty: A New Approach*.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y Press.
- Cohen, D., T. Piketty, and G. Saint-Paul. 2002. *The Economics of Rising Inequali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ly, M. 2000. "A Fine Balance: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mparison." in F. W. Scharpf and V. A. Schmidt (eds.) *Welfare and Work in the Open Economy vol. 2: Diverse Responses to Common Challen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467-510.
- Esping-Andersen, G. (ed.) 1996. *Welfare State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 in Global Economies*. London: Sage.
- European Commission. 2000. *Employment in Europe 1999*. Luxembourg: EU.
- Förster, M. F. 1993. "Comparing Poverty in 13 OECD Countries: Traditional and Synthetic Approaches." *LIS Working Paper #100*. Differdange, Luxembourg: CEPS/INSTEAD.
- Förster, M. F. 2000. "Trends and Driving Factors i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 #42*. Paris: OECD.
- Förster, M., and M. Pearson. 2002.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 Trends and Driving Forces." *OECD Economic Studies #34*. Paris: OECD.
- Foster, J., J. Greer, and E. Thorbecke. 1984. "A Class of Decomposable Poverty Measures." *Econometrica* 52(3): 761-766.
- Gottschalk, P., and J. Mary. 1998.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the Rise in Earnings Inequality: Market and Institutional Facto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 489-502.
- Gottschalk, P., and T. Smeeding. 1997. "Cross-National Comparisons of Earnings and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 633-687.
- Gustafsson, B., and M. Johansson. 1997. "In Search for a Smoking Gun: What Makes Income Inequality Vary Over Time in Different Countries" *LIS Working Paper #172*. Differdange, Luxembourg: CEPS/INSTEAD.
- ILO. 1999. *Key Indicators of Labour Market*. Geneva: ILO.
- ILO. 2000. *World Labour Report 2000: Social Security and Income Protection in a Changing World*. Geneva, ILO
- ILO. 2004. *A Fair Globalization: Creating Opportunity for All*. Geneva, ILO.
- Kangas, O., and J. Palme. 1998. "Does Social Policy Matter? Poverty Cycles in OECD Countries." *LIS Working Paper #188*. Differdange, Luxembourg: CEPS/INSTEAD.
- Katz, L., and D. Autor. 2000. "Changes in the Wage Structure and Earnings Inequality." in O. Ashenfelter and D. Card (eds.) *The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III. Amsterdam Elsevier.
- Kim, H. 2000.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Taxes and Income Transfers in Welfare State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3(4): 105-129.
- Korpi, W., and J. Palme.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for Equality: Welfare State

-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661-687.
- Kuhnle, S. (ed.) 2000. *Survival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London: Routledge.
- Mahler, V. A. 2001. "Economic Globalization, Domestic Politics and Income Inequality in the Developed Countries: A Cross-National Analysis." *LIS Working Paper #273*. Differdange, Luxembourg: CEPS/INSTEAD.
- Mishra, R. 1999. *Glob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Northampton, MA: Edward Elgar.
- Mitchell, D. 1991. *Income Transfers in Ten Welfare States*. Brookfield, VT: Gower Publishing Company.
- OECD. 2002a.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 OECD. 2002b.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 Oxley, H., T. T. Dang, and P. Antolin. 2000. "Poverty Dynamics in Six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30. Paris: OECD.
- Ritakallio, V. 2001. "Trends of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 Cross-National Comparison." *LIS Working Paper #272*. Differdange, Luxembourg: CEPS/INSTEAD.
- Rodrik, D. 1997. *Has Globalization Gone Too Far?*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Rodrik, D. 2000. "How Far Will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Go?"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4(1): 177-186.
- Sarfati, H. 2002. "Labour Market and Social Protection Policies: Linkages and Interactions." in H. Sarfati and G. Bonoli (eds.) *Labour Market and Social Protection Reform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Parallel or Converging Tracks?* Hampshire, UK: Ashgate Publishing.
- Sawyer, M. 1976.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 Sen, A. 1976. "Poverty: An Ordinal Approach to Measurement." *Econometrica* 44(2): 219-231.
- Smeeding, Timothy M. 2001. "Income Maintenance in Old Age: What Can be Learned from Cross-National Comparisons." *LIS Working Paper #263*. Differdange, Luxembourg: CEPS/INSTEAD.
- Smeeding, T. 2002. Globalization, Inequality, and the Rich Countries of the G-20: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Center for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8*.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 United Nations. 2001.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0 Revisions*. New York: United Nations.
- World Bank. 2002. *Globalization, Growth, and Poverty: Building an Inclusive World Econo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200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New York: World Bank.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verty Trend and Driving Factors in Welfare States

Kim, Hwan-Jo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1980s, the western welfare states have experienced a wide spectrum of socio-economic changes; changes in population composition, the economic globalization, the post-industrialization, an increasing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etc.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of poverty in welfare states, and analyzes how those socio-economic changes are related to it.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first calculates the poverty indices for several years in 10 welfare states using the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and then decomposes the index by subpopulation and income source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welfare state in general has experienced an increasing trend in the degree of poverty since the 1980s. In particular, poverty has greatly intensified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Many other welfare states including Canada, Germany, Sweden, and Norway have also experienced substantial increases in poverty.

The increasing trend of poverty is not wholly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composition such as increases in the aging population and one-parent(mother) families. Contrary to the traditional belief, these population groups are not as much poor as the working-age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degree of poverty in the elderly is less severe than in the working-age group. Furthermore, since the 1980s the market income poverty in the aging population has shown a decreasing trend in many welfare states. The degree and trend of poverty in one-parent families vary greatly across countries, owing to the labor market and income transfer policies.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 increasing poverty trend in the welfare state is that the degree of poverty has been deepening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Especially, the market income poverty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has considerably increased in every country except the Netherlands. Structural changes in the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may drive the increasing trend of poverty. Further studies and deliberate anti-poverty policies are needed to tackle the factors relating to the increase in the market income poverty.

Key words: poverty, welfare state, income transfer, market income, globalization, anti-poverty effect

[접수일 2004. 12. 23. 게재확정일 2005. 1. 20.]

<부표> 인구집단별 가처분소득 및 시장소득 빈곤갑의 변화추세

국명	연도	생산연령(18~64세)가구		편부모가구		노인가구		전체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캐나다	1987	6.441	2.514	36.032	4.371	38.878	1.317	11.994	2.481
	2000	7.158	2.945	19.083	2.406	35.969	0.789	12.261	2.607
핀란드	1987	3.995	1.087	7.454	3.613	28.811	0.686	7.235	1.231
	2000	7.403	0.889	15.450	1.151	13.300	0.529	9.321	0.868
독일	1984	7.884	1.417	30.160	6.124	77.029	2.539	20.477	1.722
	2000	9.547	1.808	22.853	4.724	61.541	1.676	20.765	1.987
이탈리아	1991	7.737	2.246	12.527	6.154	49.396	1.839	16.149	2.255
	2000	10.616	4.245	13.548	8.297	54.564	2.575	20.843	3.962
룩셈부르크	1991	8.196	0.195	16.182	1.820	61.993	0.757	15.852	0.354
	2000	9.805	0.872	17.461	2.349	51.498	0.408	16.728	0.883
네덜란드	1983	11.570	0.991	57.076	0.952	50.253	1.500	18.437	1.055
	1999	8.843	3.274	20.783	5.594	39.314	1.671	14.147	3.241
노르웨이	1979	3.792	1.013	21.287	2.406	54.392	1.975	13.633	1.298
	2000	7.159	1.675	10.899	1.151	46.044	0.327	14.482	1.356
스웨덴	1981	6.964	1.724	21.272	2.400	67.541	0.029	19.230	1.443
	2000	10.917	2.237	11.585	0.707	54.733	0.560	19.015	1.650
영국	1979	6.752	1.710	28.941	2.428	53.979	1.080	15.594	1.648
	2000	12.011	2.244	46.667	3.194	48.474	3.068	23.011	2.515
미국	1986	6.310	3.920	35.633	18.408	37.562	5.589	14.050	5.867
	2000	6.894	4.058	21.112	12.588	37.975	5.995	12.932	5.294

* 빈곤갑은 Foster 외의 빈곤지수에서 α 의 값을 1로 주어 계산한 것이며, 100을 곱하여 퍼센트로 표기하였음.